

행 정 법

문 1. 국가배상법 제2조의 이중배상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‘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’에 대하여 이중배상에 관한 배제조항을 두고 있으며, 헌법재판소는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이러한 단서를 합헌으로 보았다.
- ② 판례는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자는 전투경찰순경과 공익근무요원 등이라고 하였다.
- ③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헌법상으로도 이중배상 배제가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.
- ④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금·유족연금·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문 2.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?

- ㉠.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㉡. 판례는 연령을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.
- ㉢.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직권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.
- ㉣.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불가쟁력을 가진다.

- ① \neg, \perp
② \neg, \sqsubset
③ \perp, \sqsubset
④ \sqsubset, \sqsubset

문 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,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.
-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④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문 4.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,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됨이 원칙이지만,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.
- ③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은 붙일 수 있는데,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.
- ④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의 변경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.

문 5.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령보충적인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들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.
- ②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.
- ③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의 영업정지처분기준은 대통령령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.
- ④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세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 바 있다.

문 6.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당해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다.
- ②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, 이를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.
- ③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.
- ④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.

문 7.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- ② ○○주식회사에 대한 피청구인 순천시장의 과세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과세권한을 둘러싼 다툼에 있어, 순천시장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- ③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강남구의회로 하여금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입하도록 예상되는 비용을 강남구에 미리 통보한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
문 8. 판례에 의할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
- ③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자와의 관계
- ④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

문 9.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.
- ②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상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.
- ③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④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처분이다.

문 10. 행정조직상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판례는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이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 의사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.
- ③ 협의의 법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한 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, 정부조직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.
- ④ 임의대리의 수권은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고 권한전부에 대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.

문 11.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70일 만에 형의 사면 등으로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-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면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, 이미 종전 재직기간에 산입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신청기간의 제한 없이 합산신청을 할 수는 없다.
- ③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.
- ④ 당초 임용 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던 자를 그 후의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특별임용한 경우, 특별임용 당시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특별임용은 당연무효이다.

문 12. 경찰의 임무 중 하나는 ‘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’인 바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공의 안녕이란 신체·생명·자유·재산 등 개인의 권리보호, 객관적인 법질서의 유지, 국가의 존속과 그 기관의 시설 및 기능 보호를 의미한다.
- ② 공공의 질서란 지배적인 사회의 가치관에 비추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고 간주되는 규율의 총체를 의미하는 바, 성문의 범규범뿐만 아니라 불문의 규범도 포함된다.
- ③ 과거 공공의 질서에 포함되던 많은 영역이 그동안 성문화되어, 공공의 질서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.
- ④ 위험이란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제지되지 않고 진행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경찰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.

문 13.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의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에 개별적 법률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.
- ③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조례가 법령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더라도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문 14.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,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.
-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·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비밀에 붙여야 하며,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·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문 15. 환경정책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 환경기준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
- ② 환경오염원인자에 대한 부담
- ③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
- ④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

문 16. 공물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며, 이러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공물관리자의 재량행위이다.
- ② 도로는 일반국민이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,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라도 그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룰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.
- ③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로부지를 점유하여 온 자는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하여 한 같은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.
- ④ 비관리청이 조성 또는 설치한 항만시설의 경우,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당해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것은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.

문 17. 국유재산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유재산은 그 양도성이 제한되지만 사권은 설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.
- ② 관리청은 공용·공공용·기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- ③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이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.
- ④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문 18.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.
- ② 청문주제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행정청에 청문주제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제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.
- ③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과 당사자 간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청문 실시 등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하면 설사 청문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.

문 19. 판례에 의할 때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
- ②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에 동조 또는 방조한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- ③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회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
- ④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,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,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

문 20.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심판의 제기는 처분청을 경유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심판사항에 대해 개관주의가 채택되고 있다.
- ③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의 대상이다.
- ④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.